

전세계 남방의 기세 드높은 력사론리

—반동회의 소집 70 주년을 기념하여



2024년 3월 7일 찍은 인도네시아 반동의 아시아—아프리카회의 기념박물관 외관 / 신화넷

인도네시아 반동 도시에 가면 한 유백색 유럽식 건물이 눈에 띈다. 이곳은 지난 1955년 4월, 29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지역)의 대표들이 제1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를 개최했던 력사적 현장이다. 이후 전세계 남방은 ‘단결·우의·협력’의 반동정신을 기초로 지난 70년 동안 자주독립, 연합자강의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 자주독립 의식 각성

15세기초부터 서방 열강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지역을 침략하고 식민 지배했다.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까지 제국주의 식민 체제가 거의 모든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서 횡행했다.

수세기에 걸친 서방의 식민통치로 수많은 남방 국가들이 자주독립을 상실하고 자원과 인구를 약탈당하는 등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후 유럽 열강이 약화되면서 전세계 남방 국가에선 반제국주의와 반식민지 운동이 점차 고조됐다. 1955년, 현대 국제관계사에 굽적한 한 획을 그은 반동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세계 평화와 협력 증진에 관한 선언>을 통과,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완전 존중’, ‘타국의 내정 불간섭’ 등 반동 10원칙을 선언했다. 반동회의는 민족독립의 자신감을 크게 고무시키고 반제국주의와 반식민지 투쟁을 새로운 단계로 이끌었다. ‘아프리카 독립의 해’로 불리는 1960년, 아프리카에서는 베닌을 포함한 17개국이 식민통치에서 벗어났다. 그 해 유엔은 <식민지독립부여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식민주의에 ‘사형’을 선고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잇달아 정치적으로 독립하면서 오랜 기간 불평등했던 국제질서에 큰 변화가 일었다. 유엔 회원국은 창설 당시의 51개국에서 현재의 193개국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공동의 력사적 경험은 전세계 남방 국가에 자주독립이라는 정치적 색채를 더했다. 그 과정에서 반동정신은 중요한 자침이 됐다.

반동정신의 실천자인 중국은 언제나 전세계 남방 국가들과 동고동락했다. 1970년대, 중국 공정기술자 5만 명 이상이 1,860킬로미터의 탄자니아—잠비아 철도를 건설하며 남아프리카국가의 민족독립 및 해방 사업을 강력히 지원했다. 이뿐만 아니라 1958년 중국은 민족독립을 위해 임시 정부를 수립한 알제리를 즉시 인정하고 도의적·물질적 지원을 제공했다. 이는 전세계 남방 국가의 반제국주의와 반식민지 투쟁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지지를 보여준다.

보답이 돌아왔다. 1971년 10월 25일, 많은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제26차 유엔총회에서 새 중국에 대한 유엔의 합법적 의석 회복이 결정됐다.

1949년 새 중국 창건 이후 지금까지 중국인민은 자력갱생, 고군분투를 통해 부강의 길로 나아가며 위대한 도

약을 일궈냈다. 중국 발전의 성공적 경험은 한 민족이 자주독립을 초석으로 세계에 우뚝 설 수 있음을 입증했다.

◇ 연합자강 : 전세계 발전 추진

1980년대 당시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의 주재로 <남과 북 : 생존을 위한 전략> (이하 ‘브란트 보고서’)이 발표됐다. 브란트 보고서는 1인당 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세계를 ‘부유한 북방’과 ‘가난한 남방’으로 구분했다. 이는 전세계 발전 불균형의 상징이 됐다.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경제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은 전세계 남방 국가의 공통된 념원이다.

반동회의의 개최는 발전도상국 경제 연합과 자강이 시작되는 력사적 분수령이 됐다.

이후 1962년,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국가 대표는 애급 카이로에서 경제발전문제회의를 열고 국제사회가 불공정한 무역 규칙을 조속히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1964년 제1회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발전도상국의 리익을 대변하는 ‘77그룹’(G-77)이 설립됐다. 1967년, 77그룹은 첫 부장급회의를 개최해 ‘최빈국가’ 개념을 제시하고 ‘남남협력’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경제의 새로운 질서 수립을 촉구했다.

전세계 남방 국가간 경제협력은 부단히 심화되고 있다. 아프리카연합, 아세안,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공동체 등 협력기제가 마련되고 유엔 틀 아래 농업, 의료, 공업 등 ‘남남 기술협력’ 기제가 추진되는 등 협력상생의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그중 중국의 성취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세계 최대 발전도상국인 중국은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이라는 ‘두가지 기적’을 실현했다. 중국식 현대화는 ‘현대화 = 서구화’라는 틀을 깨고 전세계 남방 국가가 자국의 국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견도록 장려했다.

반동정신의 실천자인 중국은 전세

계 남방의 발전 권리를 확고하게 수호하며 반동정신의 시대적 의미를 끊임없이 확장시켜왔다. 중국의 발기로 설립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남방 국가의 인프라 용자에 새로운 통로를 열어줬고 브릭스(金砖) 5개국이 공동 설립한 신개발은행은 브릭스국가 등 신흥경제체와 발전도상국의 경제 발전에 금융 ‘생명수’를 주입해줬다. ‘일대일로’ 공동건설로 구축된 호연호통(互联互通·상호연결) 네트워크는 공동건설 국가에 더 많은 발전 기회를 창출했다. 이처럼 중국이 제공한 기술과 자금 지원은 전세계 남방 발전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오늘날 전세계 남방의 경제총량은 세계에서 40% 이상을 차지하고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80%에 달한다. 과거 세계경제의 ‘변두리’는 이미 가장 활기가 넘치는 ‘중심지’가 됐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부유한 북방’과 ‘가난한 남방’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들이 떠올리는 건 ‘각성하는 남방’, ‘굴기하는 남방’이 됐다.

그러나 국제무역, 금융 체계, 지식 재산권 보호 등 핵심 의제에 있어서 구조적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전세계 남방 국가의 발전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굴기의 길에서 부딪치는 갖가지 도전에 맞서 전세계 남방 국가는 일방주의, 보호주의, 무역전행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고 손을 맞잡고 보혜(보편적 혜택)·포용의 경제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 국제질서 개편하는 핵심 력량으로

70년전, 29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지역) 대표는 <제1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 최종 성명서>를 통해 국제 정치 민주화의 ‘문’을 두드렸다. 반동회의는 ‘단결·우의·협력’을 제창하는 반동정신이라는 력사적 성과를 거둬으로써 남방 국가의 정신적 뉴대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서방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흔들어놓았다.

“우리는 남방 국가의 굴기를 묵도

하고 있다.”, “전세계 남방은 이미 전세계 경제에서 가장 강한 활력을 만드는 력량중 하나가 됐다.” 3월에 열린 2025 박오포럼 년차총회에서 전세계 남방은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반동정신의 실천자인 중국은 다자주의 제창, 남남협력 추진, 지역 일체화 심화뿐만 아니라 발전도상국 원조, 전세계 남방 발언권 확대, 전세계 관리체계의 개혁·보완 참여 등 방면에서 시종일관 다수의 발전도상국 편에 서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160여개 국가에 발전 원조 제공, 다수의 발전도상국을 포함한 150여개 국가와 함께 구축한 ‘일대일로’ 공동건설, 전세계 발전및남남협력기금 설립, 남방 국가와 공동으로 ‘개방적 과학의 국제협력 창’을 발기하여 중국—아프리카 현대화 공동 추진의 ‘10대 동반자 행동’ 제시, 전세계 남남 협력을 지지하는 8개 조지 발표… 전세계 남방의 ‘천연적인 일원’으로서 중국은 언제나 전세계 남방을 마음에 두고 전세계 남방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중국이 제시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리념, 전세계 발전 창 의, 전세계 안보 창 의, 전세계 문명 창 의는 각국 특히 평화·발전·공평·정의를 추구하는 전세계 남방 국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리념과 창 의들은 반동정신과 일맥상통하며 협력상생을 추구하고 패권주의와 일방주의 행위를 반대한다. 이와 더불어 세계평화 적자, 발전 적자, 안보 적자, 관리 적자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전세계 남방의 공동 념원에 순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0년전, 국가주석 습근평은 반동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형세 아래 반동정신은 여전히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반동정신을 크게 발양하고 그 새로운 시대적 의미를 끊임없이 부여해 협력상생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관계를 구축하고 국제 질서와 국제체계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는 한편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에 아시아, 아프리카 및 기타 지역 인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줘야 한다.”고 말했다.

습근평 주석은 또 2024년 6월 ‘평화공존 5항 원칙’ 발표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전세계 남방은 “보다 개방·포용적인 태도로 손잡고 함께 나아가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추진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평화 수호의 안정적 력량’, ‘개방·발전의 중견적 력량’, ‘전세계 관리의 건설적 력량’, ‘문명 상호 학습의 촉진적 력량’을 함께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력사의 저울이 새로운 각도로 맞춰지고 있다. 전세계 남방은 나날이 높아지는 자신감을 가지고 력사 주체의 신분으로 인류문명진보에 자신의 기여를 하고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의 위대한 사업에서 새로운 시대 력량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

/ 신화넷

중국—인도네시아

외교·국방부장 ‘2+2’ 대화기제 첫 회의 북경서

4월 21일,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외교부장인 왕의와 국방부장 동군은 인도네시아 외교부장 수기 오노, 국방부장 사프리와 북경에서 중국—인도네시아 외교·국방부장 ‘2+2’ 대화기제 첫 회의를 공동 주재했다.

량측은 량국 정상의 합의를 바탕으로 량국의 우호적인 상호 신뢰와 전략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중국—인도네

시아 운명공동체의 지역 및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며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시대의 선두에 항상 함께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량측은 중국—인도네시아 포괄적 전략 대화기제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또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군축, 확산 방지 및 군비통제 협의기제를 구축해 법집행 안전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 국제방송

윤석열 ‘내란 발동 혐의’ 사건 2차 법정심리에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심리 현장 / 신화넷

4월 21일,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전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발동 혐의’ 사건 2차 법정심리를 가졌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 윤석열의 모습이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되었다.

대중들의 주목도 등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은 법정심리 시작전 매체가 윤석열이 법정에 들어오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허용했다. 재판정은 이어서 매체에 퇴거를 요구했으며 2차 법정심리를 정식으로 가동했다.

한국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당일 법정심리에서 윤석열측 변호사와 군측 증인들이 격렬한 변론을 벌였다. 증인들은 윤석열이 계

엄령을 반포한 당일 밤 “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하고 윤석열측은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 계속 의혹을 제기했다.

1월 26일, 한국 검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발동 혐의’로 윤석열을 구류, 기소했다. 윤석열은 한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기소된 현직 대통령이다.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통과를 선포, 윤석열은 즉각 대통령 직무를 파면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4월 14일 윤석열의 ‘내란 발동 혐의’에 대한 첫 법정심리를 가졌다.

/ 신화넷

한국 경찰

이재명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 류포 사건 수사

한국 서울경찰청은 4월 21일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자이며 최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표인 이재명을 대상으로 류포한 딥페이크(深度伪造) 영상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다불어민주당이 6건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출한 동시에 여러 용의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网络) 수사부는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한국 제21기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에 개최된다. 이재명은 4월 10일 대선에 참가한다고 선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4월 27일에 대선후보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재명의 선거캠프는 영상플래트홈 ‘유투브’(优兔)의 10여명 유투버(博主)를 상대로 4월 16일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이재명을 비방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지속적으로 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인민넷—조문판

하버드대학, 트럼프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미국 하버드대학은 4월 21일 트럼프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정부가 연방자금 동결을 수단으로 하버드대학의 학술 결책을 통제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하버드대학 교장 앨런·M·가버는 이날 하버드커뮤니티 회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학교가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방법원에 트럼프정부를 상대로 자금 동결을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 불법행위이라고 지적했다.

가버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버드대학교가 ‘불법 요구’를 준수하지 않은 데 대한 응답으로 연방정부는 처음 22억달러 자금을 동결한 외에도 10억 달러의 추가 자금 동결을 고려하고 하버드대학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시작하여 국제 학생에 대한 교육을 위협했으며 하버드대학의 면세 자격 철회 등을 고려중이라고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런 행위는 학생, 교직원, 연구원 및 미국 대학교육의 세계적 지위에 ‘엄중한 현실

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언론은 이번 소송이 미국 대학교육계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학식적인 투쟁의 ‘중대한 격화’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트럼프정부 관원은 11일 하버드대학에 서한을 보내 ‘의미있는 관리 개혁과 재편성’을 진행할 것을 학교에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연방자금이 삭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하버드대학은 트럼프정부의 이런 요구를 거부했다. 트럼프정부는 당일 늦게 해당 학교에 대한, 다년간 지속해온 22억달러의 예산과 6,000만달러의 계약금을 동결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16일,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는 트럼프정부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학생 비자 소지자의 ‘불법 및 폭력 활동’ 정보를 공유할 것을 하버드대학에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외국인 류학생 모집 및 학자 교류 프로그램 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신화넷



2024년 10월 17일, 한 력행객이 인도네시아 파다라랑역에서 자카르타—반동 고속열차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고 있다.

/ 신화넷